

북한의 지역격차와 균형개발전략*

이 재 하**

Regional Disparities and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in North Korea*

Jaeha Lee**

요약 : 본 연구는 북한의 지역격차를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으로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확대·설치가 불가피한 경제특구와 연계하여 지역균형개발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북한의 지역간 인구성장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지역균형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주도시 평양과 여타 지역간에 극심한 지역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특구는 낙후된 지역 즉, 평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고르게 입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경제특구는 북한의 보유자원 관점에서 노동집약적인 가공공업형 경제특구와 관광형 경제특구로 나누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지 후보지로는 신의주·남포·해주·청진·김책·함흥·원산 등의 지구는 가공공업형 경제특구로, 금강산·백두산·묘향산 등의 지구는 관광형 경제특구로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주요어 : 북한, 지역격차, 지역균형개발전략, 경제특구

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regional disparities in North Korea and suggests a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with linkage to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economic zone(SEZ). SEZs are required inevitably to solve the economic crisis and to accomplish th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in North Korea. Furthermore, it is said that there are two types of SEZs, labor intensive manufacture and tourism, appropriate to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resource use. As North Korea is faced with serious regional disparities between primate city Pyongyang and other areas, it is desirable that SEZs will be located evenly in all other areas beside Pyongyang.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at proper locational areas of the manufacture-centered SEZ are Shinuiju, Nampo, Haeju, Chongjin, Kimchaek, Hamhung and Wonsan; and also, those of the tourism-centered SEZ are Mt. Kungangsansan, Mt. Paekdusan and Mt. Myohyangsan.

Key Words : North Korea, regional disparity,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special economic zone

1. 서론

1) 연구목적

최근의 우리 사회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구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와 그로 인한 독일의 통일실현 등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 보다도 남북통일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 또한 고조되어 있다. 더욱이 김일성 사망에 따른 북한의 통치 권력의 약화현상과 필요한 식량마저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위기에 직면한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앞당

겨 질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더욱 고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내의 관계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대내외적인 정치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근거로 대체로 가까운 장래에 남북통일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남북 통일 방식에 대한 논의 못지 않게 북한을 다방면에서 바르게 분석·이해하고, 그에 따라 통일과정과 통일 후에 예상되는 제반 사회적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통일과정 또는 통일 후에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남북간의 현격한 경제적 발전격차로 인한 남한으로의 대량 인구유입과 그에 따라

* 이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수반되는 각종 사회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북한 내에서도 지역간의 발전격차로 인해 낙후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역으로의 인구집중 현상과 그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들의 지상목표인 사회주의적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위해서 나름의 국토개발 정책을 전개해 왔다. 북한의 국토개발은 경제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족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부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국토내의 자연자원을 최대한으로 개발 이용하기 위한 국토의 자연 개조 사업과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간 균형개발에도 초점을 두고 추진돼 왔다(염형민·류승한, 1992, 102-111).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의 국토개발에 대한 연구 부족으로 북한의 지역격차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각 지역의 지리적 조건의 차이와 국토개발에 대한 정치·군사적인 정책적 요인 등으로 지역간의 발전격차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에 북한은 자력갱생노선에 의한 경제개발이 한계에 봉착하자 대외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증진과 그들의 자본 및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 부분적인 대외 개방적 경제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74호를 통해 라진-선봉 지역(621km²)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 것과 이 지대와 북한의 다른 지역에 대한 외국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제정·공포한 일련의 각종 법률과 시행규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박정동, 1996, 240-381). 라진-선봉 지대는 북한의 낙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범적인 시장경제적인 경제개발 사업 지구이자, 또한 시범적인 대외 개방적인 지역개발 사업지구라고 볼 수 있다. 라진-선봉 지대의 성공여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북한의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외 개방적인 경제개발 사업을 여러 지역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시급히 요청된다. 이러한 조치는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점과 북한내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시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북한 내에 형

성된 지역간 발전격차를 이해하고, 아울러 통일과정과 통일 후에 예상되는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북(對北) 관련 정책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북한의 지역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북한내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전략 즉, 북한의 지역균형개발전략을 모색·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내용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별 연구내용과 그에 따른 연구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북한이 그 동안 추진한 지역균형개발정책의 내용을 검토해 본다. 북한의 국토개발은 자연개조사업과 지역 또는 국토 균형개발사업으로 나누어지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역균형개발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발간된 관련문헌과 국내의 북한관련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북한의 지역균형개발정책과 관련하여 북한내의 지역간 발전격차를 인구성장 지표를 통해 분석·파악해 본다. 지역의 격차는 지역별 인구성장, 산업생산액, 소득수준, 산업구조, 그리고 발전관련 기타 제 지표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 지표 중에서 인구성장 지표를 통해 지역격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인구지표를 이용한 주된 이유는 북한당국이 1963년 이후 사회경제적인 통계자료를 공개·발표하지 않아(노용환·연하청, 1997, 14), 인구(그것도 상당부분은 우리의 추정치 임)를 제외한 다른 발전지표에 의한 객관적인 지역분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해석할 경우에 그 분석지표로, 국내외 문헌에서 각각 인구수 또는 인구성장률을 3대 지표 중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을 만큼(박범조·고석찬, 1998, 37-38), 한 지역의 인구성장 지표는 그 지역의 성장과 발전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종합적 발전지표로서 지역의 발전격차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지표로 볼 수 있다. 비록 북한 당국이 거주·이전을 통제함으로써 인해 인구이동률(1987년 현재 5.9%)이 낮기는 하지만(동년 남한은 22.6%),

주로 지역발전격차에 관계된 요인으로 인구의 지역간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어(노용환·연하정, 1997, 44-45) 지역의 인구성장은 지역의 발전격차를 잘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지역격차는 세 가지 공간범위에서 분석된다. 먼저, 시·도별 인구의 성장률과 구성비의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시·도지역간의 격차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인구성장률의 차이를 통해 도·농간의 격차를 분석해 보며, 마지막으로 도시간의 인구성장률의 비교분석을 통해 도시간 발전격차를 파악해 본다. 아울러 도시간 발전격차에서는 Davis의 종주화지수 공식을 통해 북한 대도시의 발전격차를 보다 더 명백히 분석·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지역격차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 즉 북한의 지역균형개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현재 낙후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대외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라진-선봉 지구와 같은 대외 의존적인 자유경제무역지대 또는 경제특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의 낙후된 지역으로의 경제특구 확대 지정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낙후된 지역의 개발잠재력과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경제특구 또는 개발거점의 여러 후보지를 선정해 보고자 한다. 한편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라는 용어는 1997년 중국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중국의 것만을 지칭하지 않고 세계 각국에서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대외 개방적인 투자유치지역을 총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남궁영, 1995; 박정동, 1996; 권기철, 1997).

2. 북한의 지역균형개발정책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지역간의 균형발전 문제는 중요한 정책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기본적인 사회이념인 맑스

와 레닌의 사상이 도시와 농촌간의 조화로운 발전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Berry and Horton, 1970, 86). 북한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차이, 지역들 사이의 차이를 없애고 나라의 모든 지역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고르게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적 요구이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만큼(리수일, 1990, 45), 지역의 균형개발 문제는 개발정책의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6.25전쟁 직후에 있는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공장, 기업들은 몇 개의 도시에 집중시키지 말고, 전국의 모든 지역에 균형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노동당의 방침으로 정하였다고 한다(윤복녀·김강산, 1992, 34).

그러나 북한에서 실제로 지역의 균형개발 정책이 본격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라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은 1964년에 발표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군(郡)은 지방의 경제문화 발전의 종합적 단위로 되고 있다. 지방공업이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하며 농촌경리의 발전도 군이 직접 지도한다”(김일성 저작집, 18권, 229)라고 주장한 바 있다(윤복녀, 1992, 17). 이에 따라 북한당국이 군단위 지역을 지방경제 발전과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삼고, 군 중심의 지역개발정책을 공식화하였다.

군이 지방경제 발전의 거점이자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의 개발거점으로서 적합하다고 보는 것은 첫째, 군은 면적과 인구 등 그 크기 면에서도(道)처럼 너무 크지도 않고, 리(里)처럼 너무 작지도 않으며, 둘째, 군은 지방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적 및 물질 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셋째, 군은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는 경제적 거점이면서 근로자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단위로서의 조건을 원만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윤복녀, 1992, 17-18). 한편, 북한은 1952년 12월에 종전의 도·시·군·면·리로 이어지던 4계층의 행정구역체에서 면(面)을 폐지하고, 직할시·도·구역·시·군·

동·읍·리·노동자구로 하는 3계층 체제로 행정구역 개편한 바 있다.

이러한 도·농간 및 지역간의 균형개발정책은 1970년대에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1972년에 제정된 북한의 신 헌법 제26조에서 “경제개발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만큼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개발 문제는 북한의 개발정책에서 기본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후 1977년에 제정·공포된 국토의 개발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인 「토지법」에 의해 수립·집행되기 시작한 국토건설총계획도 지역별 균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워졌다고 한다(윤복녀·김강산, 1992, 34). 북한의 국토 및 지역개발의 기본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국토건설총계획은 토지와 강·하천 및 자연 부원(富源)의 개발과 이용과 같은 이른바 자연개조사업, 항만의 개발과 도로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개발, 그리고 공장기업소의 배치와 도시와 농촌의 개발과 같은 지역의 균형개발 등이 반영된 종합계획으로서 계획기간이 최소한 10년 이상이 넘는 장기계획이라고 한다(윤복녀·김강산, 1992, 34-35).

국토건설총계획에 의해 대규모 국토개발 사업이 추진되던 1980년대 이후에도 북한은 지역의 균형개발에 대해 꾸준히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 같다. 북한의 국토건설총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198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지역개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1981년 10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4대 자연개조사업(30만 정보의 간석지 개간, 20만 정보의 새땅 찾기, 서해감문건설, 태천 발전소 건설)을 제시함에 따라 이후의 국토개발정책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력하기도 하였다(편집위원회, 1992, 4; 염형민, 1994, 49-59). 이러한 가운데도 지역간 균형개발에 대한 북한당국의 정책적인 관심과 노력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균형개발에 관련된 김정일의 일련의 지적 사항과 그에 따른 정책적 반영 및 최근 북한 학자들의 관련논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김정일은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의 방침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합법적 요구이다”라고 하고,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지방인민들의 여러 가지 물질문화적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고 나라의 전반적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도 빨리 줄일 수 있다”라고 하였다(리수일, 1990, 43-45). 또한 그는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경우 “지방공업은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리경섭, 1990, 40). 이와 같은 김정일의 지적은 경제계획에도 반영돼, 군(郡)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방경제 특히 지방공업의 발전은 중요한 계획목표로 설정되었다. 2차 7개년 계획(1978~1984)에서는 지방공업을 2.4배로 향상시키고, 3차 7개년 계획(1987~1993)에서는 지방공업을 2.5배로 증대시킨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국토통일원, 1988, 15). 이에 따라 최근에 다수의 관계학자들도 공장과 기업소들의 균형적 배치에 관한 원칙과 방법(윤복녀·김강산, 1992), 군을 단위로 하는 지방경제 발전의 당위성과 방법(리수일, 1990; 강영원, 1994; 한태홍, 1995; 박재영, 1997; 리기반, 1999; 김성금, 1999; 손명선, 1999), 그리고 군을 단위로 하는 지방공업 발전의 원칙과 방법(리경섭, 1990; 윤복녀, 1992; 손철준, 1992; 박재승, 1994; 백원배·리철호, 1995) 등과 같은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학문적인 독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역간의 균형개발에 대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더욱이 학자들의 논문에서 볼 때, 1990년대에는 최근으로 올수록 이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아마도 군단위지역의 개발 또는 지방경제개발을 통해 북한의 어려운 경제난을 해소하고자 하기 위함일지도 모른다.

3. 북한의 지역간 발전격차

1) 시·도 지역간 발전격차

해방 당시에 북한은 평안 남·북도, 함경 남·북도, 황해도, 강원도의 6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도급 행정구역을 개편한 바 있다(평양사범대학 지리학부, 1964; 국토통일원, 1989). 1946년에는 평양시가 특별시로 승격되었고, 38선 이북의 (구)강원도는 함경남도의 원산시·안변군·문천군과 경기도의 연천군 일부를 편입하여 (신)강원도(도청 소재지: 원산시)로 개편되었다. 1949년에는 평북의 6개 군과 함남의 장진군 일부를 분리하여 자강도(도청소재지: 강계시)를 신설하였고, 1951년에는 6.25 전쟁으로 남한에 속하였던 개성시가 북한에 편입되었으며, 1954년에는 함남의 9개 시·군과 함북의 백암군 및 자강도의 후창군을 분리·병합하여 량강도(도청소재지: 혜산시)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황해도를 황해남도(도청소재지: 해주시)와 황해북도(도청소재지: 사리원시)로 분할하였다. 1955년에는 개성시에 개풍군과 판문군이 편입되어 개성직할시로 승격되었고, 1960년에는 함흥시와 청진시가 각각 직할시로 승격되고 1967년에 각각 일반시로 격하된 바 있으며, 1980년에는 남포시가 대안시와 용강군을 편입하여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시·도는 1특별시, 2직할시, 9도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현행 시·도 지역구분에 따라 그 성장 격차를 살펴보

고자 한다.

먼저, 1993년 말 현재 북한의 시·도별 인구분포를 보면(표 1), 평안남도가 287만 여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평양특별시와 함경남도 각각 274만과 273만 여 명으로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평안북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등이 각각 200만 명을 넘어 비교적 인구가 많은 편이다. 이에 비해 황해북도, 강원도, 자강도, 량강도, 남포직할시, 개성직할시 등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량강도의 인구는 평양의 1/4에도 미달하는 64만 여 명으로서 도(道) 중에서 가장 적으며, 개성직할시는 평양의 1/8에도 못 미치는 33만 여 명으로서 시·도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구분포에서 지역간에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면적, 지형·기후조건, 농경지 분포, 사회·경제적 역사 등의 지역간 차이에도 관련이 있겠으나, 그 동안 북한의 국토개발정책이 불균형적으로 추진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1946년부터 1993년까지의 시·도별 인구성장의 차별적 변화에서 알 수 있다.

시·도별 인구구성비의 변화를 보면(표 1), 1946년 또는 1972년의 인구구성비에 비해 1993년

표 1. 북한의 지역별 인구분포변화와 도시화율

시·도	1946		1972		1982		1993			46 - 93년간 인구성장율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도시화율	
평양	323	3.5	1,847	12.7	2,526	13.7	2,741	13.3	85.91	749.4
남포	79	0.9	-	-	661	3.5	731	3.6	77.41	824.4
개성	-	-	326	2.2	330	1.8	334	1.6	48.73	-
평북	1,513	16.2	1,765	12.0	2,165	11.7	2,437	11.9	54.35	61.1
평남	1,409	15.1	2,227	15.1	2,495	13.5	2,866	14.0	61.93	103.4
함북	909	9.8	1,548	10.5	1,804	9.8	2,061	10.0	71.95	126.7
함남	1,379	14.8	1,928	13.1	2,433	13.2	2,732	13.3	60.71	98.1
황북	752	8.1	1,114	7.6	1,353	7.3	1,512	7.4	43.61	101.0
황남	960	10.3	1,494	10.2	1,774	9.6	2,011	9.9	34.14	109.6
강원	1,223	13.2	1,222	8.3	1,353	7.3	1,304	6.3	46.82	6.7
자강	437	4.7	760	5.2	1,022	5.5	1,153	5.6	65.35	163.8
량강	313	3.4	462	3.1	571	3.1	638	3.1	72.04	104.0
계	9,297	100.0	14,693	100.0	18,489	100.0	20,522	100.0	60.92	120.7

주: 1. 1946년과 1993년 자료는 북한당국이 발표한 것이고, 1972년과 1982년 자료는 한국에서 추정된 것임.
 2. 1946년의 평북, 함북, 함남, 황북, 황남, 자강, 량강 등의 도별 인구수는 필자가 행정구역 변경과정을 역추적하여 이들 도에 속하던 당시 시·군 지역의 인구수로 산정한 것임.
 3. 강원도는 6.25 전쟁으로 상당한 영역이 남한의 관할하로 편입되었음.
 자료: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북한연구소, 1983; 노용환·연하정, 1997.

의 그것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지역은 평양·남포·자강·함북 등이고, 그 외 개성·평북·평남·함남·황북·황남·강원·량강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인구구성비가 높아진 지역은 모두 1946년 이후 인구성장률에서 북한 전 인구의 성장률(120.7%)을 초과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정도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좋은 지표인 도시화율에서도 1993년 현재 북한 평균(60.9%)을 훨씬 초과한 65~86% 대를 나타내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발전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평양과 남포시는 북한 전 인구 성장률의 6배 이상의 고성장을 하여 평양의 인구구성비는 1946년에 3.5%이던 것이 1993년에는 13.5%로, 남포시도 동기간에 0.9%에서 3.6%로 크게 높아졌다. 인구구성비가 낮아진 지역은 모두 인구성장률이 북한의 평균치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율에서도 평남과 량강 지역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평균 도시화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중에서도 특히 개성직할시, 황해 남·북도, 강원도 등은 도시화율이 30~40%대로서 북한의 평균치에 비해 현저히 낮아, 그 동안 상대적으로 저발전한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지역간 균형개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지역간 발전격차가 크게 발생한 것은 북한의 비합리적인 국토개발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북한은 한편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간의 균형개발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별도의 지역개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간 발전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발전한 지역인 평양은 1950년대의 전후복구사업에 이어서 1960년대부터는 김일성의 지시로 마련된 정치적 목적의 평양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평양을 혁명의 중심도시이자 사회주의의 모범적인 국제적 문화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기(엄형민, 1994, 87-110)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성직할시, 강원도, 황해남·북도 등과 같은 휴전선 인접지역이 상대적으로 저발전한 것은 군사적인 이유에서 산업시설의 배치를 배제하거나 인구과소화를 추진한 결과로 여겨진다(엄형민, 1994, 39; 북한연구소, 1983, 892).

이러한 정치 군사적인 국토정책으로 인해 그 동안에 지역간의 발전격차가 심화되기도 하였지만, 국토개발정책으로 해방 당시에 북한에서 가장 낙후지역이었던 북부 내륙산간지역(Dege, 1996, 33) 상대적으로 발전한 것은 주목된다. 자강도와 량강도가 그러한 지역으로서, 자강도는 그 동안에 인구구성비가 4.7%에서 5.6%로 크게 증가하였고, 량강도는 1972년 이후 계속적으로 3.1%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강도에는 낭림산맥과 고원을 비롯하여 강남·적유령·묘향 등의 산맥이 지나가고, 량강도에는 백두산과 마천령산맥, 개마·풍산·백무 등의 고원이 발달해 있어서 두 지역은 북한에서 가장 높고 험준한 산간 오지지역이다. 이러한 산간지역이 상대적으로 성장·발전한 것은 북한이 국토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들 지역의 산지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엄형민, 1994, 59-62)과 생산력의 균형배치정책에 의한 기초원료 산지로의 우선적인 공업배치(윤복녀·김강산, 1992, 35) 등으로 인해 수력전력이 풍부한 자강도에는 공작기계 및 무기(武器)공업이, 임산 자원이 풍부한 량강도에는 목재산업이 특히 발달해 있기(배기찬, 1994, 178-179, 193-194)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지역균형개발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것은 북한의 경제지역간의 인구분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해방 당시에 북한은 산업이 발달한 서부 해안지역과 동부 해안지역, 그리고 낙후한 북부 내륙산간지역 등의 세 경제지역을 형성하고 있었다(Dege, 1996, 33). 서부 해안지역은 오늘날 평북, 평남, 평양, 남포, 황남, 황북, 개성지역에 해당하고, 동부 해안지역은 함북, 함남, 강원 지역에 속하며, 북부 내륙지역은 자강, 량강지역에 해당한다. 이들 세 지역간의 인구구성비 변화를 보면(표 1), 서부지역은 54.1%(1946년)에서 61.7%(1993년)로 7.6% 높아졌는데 반해서, 동부지역은 37.8%에서 29.6%로 8.2%나 낮아졌고, 북부지역은 8.1%에서 8.7%로 증가해 0.6%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북한은 그 동안의 국토균형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과도한 성장으로 인해 서부지역과 동부지역간의 발전격차는 과거에 비해 오히려 더 확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도·농간 발전격차

북한의 도시성장에 관해 살펴보기 전에 북한에서 사용하는 도시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도시지역(urban area)에 대해서 시(市)라는 별개의 행정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시 또는 도시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표준적인 정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염형민, 1994, 69-70; Eberstadt, 1991, 210). 더욱이 북한의 시는 말단 행정구역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다수의 동(洞)과 소수의 노동자구 이외에 농촌취락에 해당하는 리(里)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시라고 하더라도 시의 인구 모두를 도시인구로 보기에는 곤란하다. 북한 당국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북의 중앙통계국이 1989년에 유엔인구기금(UNFPA)에 제출한 인구자료 가운데 도시와 농촌의 인구 통계표에서 “도시와 농촌지역의 인구는 거주민의 생활과 직업의 성격에 관계없이 행정구역 단위에 따라 구분되었다. 시는 농촌적인 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시의 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도시인구에 포함시키지 않고, 농촌인구로 계산되었다.”라는 작성지침(Eberstadt, 1991, 233)을 덧붙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북한은 시 행정구역 안의 리 구역을 제외한 동과 노동자구 구역의 인구만을 도시인구로 산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 당국이 발표한 도시인구수가 모든 시의 인구수 합계보다 훨씬 많게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가령 북한이 발표한 1987년의 도시인구는 1,150만 여 명인데 비해, 당시 23개 시에 거주하는 총인구는 770만 여 명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Eberstadt, 1991, 211). 따라서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도시인구는 시에서 농촌인구(리 거주인구)를 제외한 인구이다. 군(1991년 현재 148개 郡)내의 도시인구를 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의 군이 일반적으로 군소재지이자 도시적 성격이 강한 1개의 읍(邑)과 역시 도시지역에 속하는 소수의 노동자구 및 다수의 농촌취락(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자구는 공업, 광업, 임업, 수산업 등의 비농업분야에 종사하는 400명 이상의 노동자 집단

주지역이어서 도시지역으로 간주되며, 1991년 현재 233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염형민, 1994, 27-28). 요컨대, 북한당국은 농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리 구역을 농촌으로 보고 있고, 비농민이 주로 거주하는 시(특별시, 직할시인 경우는 구역)내의 동 및 노동자구 구역과 군내의 읍 및 노동자구 구역과 같은 행정구역을 도시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

앞의 2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북한은 지역간의 균형개발정책에서 특히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개발을 중시하고, 도시와 농촌의 연계거점인 군 단위지역의 지방경제발전을 통해 도·농간의 발전격차를 해소함과 아울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려 하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균형개발정책이 도·농간의 균형발전에 어떤 효과를 발휘하였는지를 도·농간의 인구성장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표 2).

북한에서도 1950년대 이후에 공업화정책 등으로 도시화가 급속히 전개되었다. 1953년에는 도시인구가 총인구(8,491천명)의 17.7%이던 것이 1970년에는 과반수가 넘는 54.2%로 크게 높아졌다. 이후 도시인구 성장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1993년에는 60.9%가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40여 년 동안에 도시인구비율은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농촌인구 비율은 동기간에 82.7%에서 39.1%로 1/2 이상 낮아졌다. 이러한 도시인구의 상대적인 급성장 또는 급속한 도시화 현상은

표 2. 북한의 도·농간 인구성장과 도시화 속도

(단위: 천명, %)

연도	도시인구	농촌인구	도시화율	도시화속도
1953	1,503	6,988	17.7	21.4
1956	2,714	6,645	29.0	12.9
1960	4,380	6,409	40.6	5.6
1965	5,894	6,514	47.5	5.4
1970	7,924	6,695	54.2	2.0
1975	9,064	6,922	56.7	0.2
1980	9,843	7,455	56.9	2.9
1982	10,362	7,412	58.3	1.0
1985	11,087	7,705	59.0	0.4
1986	11,265	7,795	59.1	2.1
1987	11,530	7,816	59.6	0.9
1993	12,501	8,021	60.9	

주: 1987~1993년의 도시화 속도는 필자가 계산하였음.
자료: Eberstadt, 1991; 노용환·연하정, 1997.

그 동안에 추진된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차별적인 개발의 결과로서 도시와 농촌간의 발전격차가 그만큼 확대되었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의 도·농간 균형개발정책은 1970년 이후에는 도·농간의 격차 완화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도시화속도(tempo of urbanization)의 연도별 변화추이에서 알 수 있다. 도시화속도는 도시인구성장률과 농촌인구성장률간의 차이로서 진행중인 도시화의 속도를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이기도 하지만, 도시와 농촌간 성장격차(urban-rural growth differential)를 의미하기도 한다(노용희 역, 1980, 31-33).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1950, 60년대에는 도시인구가 농촌인구에 비해 최소한 5.4 이상의 더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만큼 도·농간 성장격차가 매우 컸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 북한의 이러한 도·농간 성장격차는 다른 분석에서도 입증되고 있는데, 1950년에서 1970년 사이에 세계 124개국의 도·농간 인구성장률의 차율(差率)분석에서 북한은 4.33 차율로 27위(한국은 5.71로 16위)를 기록하였으며(노용희 역, 1980, 173-174), 인구 1,500만 이상의 국가간 비교에서는 세계 4위(1위는 한국임)였다는 사실(노용희 역, 1980, 32-33)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도·농간의 심한 불균형적 성장은 이 시기에 북한의 경제개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도시 또는 도시산업(공업)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농간의 격차해소를 위한 군 단위지역의 지방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1970년 이후에는 도·농간의 성장차율이 2.0 내외로 크게 낮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다. 도·농간의 성장격차가 이처럼 낮아진 것은 그간에 북한이 지역간 또는 도·농간 균형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군 또는 농촌지역 중심의 지방경제육성책이 농촌지역의 고용증대와 인구정착에 기여함과 아울러 도시화를 약화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도시간 발전격차

해방될 무렵(1944)에 북한에는 서울 다음으로 큰 평양(인구 34.1만명)을 비롯하여 청진(18.4만), 신의주(11.8만), 원산(11.2만), 함흥(11.2만), 해주(8.2만), 진남포(8.2만), 성진(6.8만), 라진(3.4만) 등

의 9개 도시(당시에는 '부(府)'로 호칭)가 발달해 있었다(홍경희, 1979, 27). 해방 직후 북한은 1946년에 평양시를 도와 같은 급인 특별시로 승격시켰고(평양사범대학 지리학부, 1964, 394), 또한 함북의 라남(1946)과 함남의 흥남(1946), 황해도의 송림(1946)과 사리원(1947), 자강도의 강계(1949) 등을 시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라남시와 흥남시는 1960년에 청진시와 함흥시가 직할시로 승격될 때 각각의 도시에 편입되었다. 또한 6.25 전쟁에 의한 관할지역의 변경으로 개성시가 1951년에 편입되었으며, 역시 동년에 성진시는 김책시로 개칭되기도 하였다. 이후 1950~60년대에는 그 동안에 진행된 급속한 도시화와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혜산(1954), 신포(1960), 구성(1967), 만포(1967), 희천(1967?), 평성(1969) 등이 시로 신설·추가됨으로써 북한에의 시급 도시는 19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단천(1982), 순천(1983), 덕천(1987), 안주(1987) 등이 시로 승격·추가되고, 1990년대에는 개천(1990), 회령(1991), 문천(1991), 정주(1994) 등이 시로 승격됨으로써 현재 북한에는 27개 시가 발달·분포해 있다. 한편 1993년에 라진시는 선봉군을 통합하여 라진-선봉시로 개편되었다(그림 1).

이러한 북한의 도시들간의 발전격차를 먼저, 도시별 인구성장률의 차이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에 분석은 도시인구자료의 한계로 북한의 도시 가운데 전후(前後)연도간 비교가 불가능한 정주, 덕천, 개천, 안주, 회령, 문천 등의 6개 도시를 제외한 21개 도시를 대상으로 각 도시별 비교기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표 3). 이들 대상도시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0.8%이나, 도시간에는 연평균 33.7% 성장한 도시(평성)가 있는가 하면, 고작 1.2% 씩 성장한 도시(강계)가 있는 등 매우 격심한 불균형적 성장을 보여주었다. 대상 도시 가운데 연평균 증가율(10.8%)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도시는 평성을 비롯하여 구성(24.4%), 희천(24.4%), 신포(19.6%), 남포(17.6%), 평양(15.9%), 함흥(15.2%), 김책(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청진(9.8%), 만포(9.7%), 사리원(7.9%), 해주(5.4%), 개성(5.3%), 라진-선봉(5.2%), 순천(4.5%), 혜산(4.2%), 원산(4.0%), 송림(3.9%), 단천(3.4%), 신

의주(3.2%), 강계(1.2%) 등의 13개 도시는 상대적으로 저성장을 보였다(그림 1).

이들 도시간의 상대적인 성장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각 도시의 기능과 지리적 위치조건(중요성)과의 관계를 비교해 본 결과, 각 도시의 중심지기능(특히 도청소재지)과 산업기능(특히 공업)과는 특별한 관련성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도청소재지 도시라 하더라도 평성과

함흥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하였는데 비해 청진, 사리원, 해주, 혜산, 원산, 신의주, 강계 등은 낮은 성장을 나타냈으며, 또한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도시라 하더라도 구성, 회천, 남포, 함흥, 김책 등은 고성장을 하였는데 비해 청진, 순천, 송림, 단천, 신의주, 강계 등은 저성장하였다는 것이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각 도시의 성장격차는 지리적 위치조건 또는 중요성과 그에 따른 북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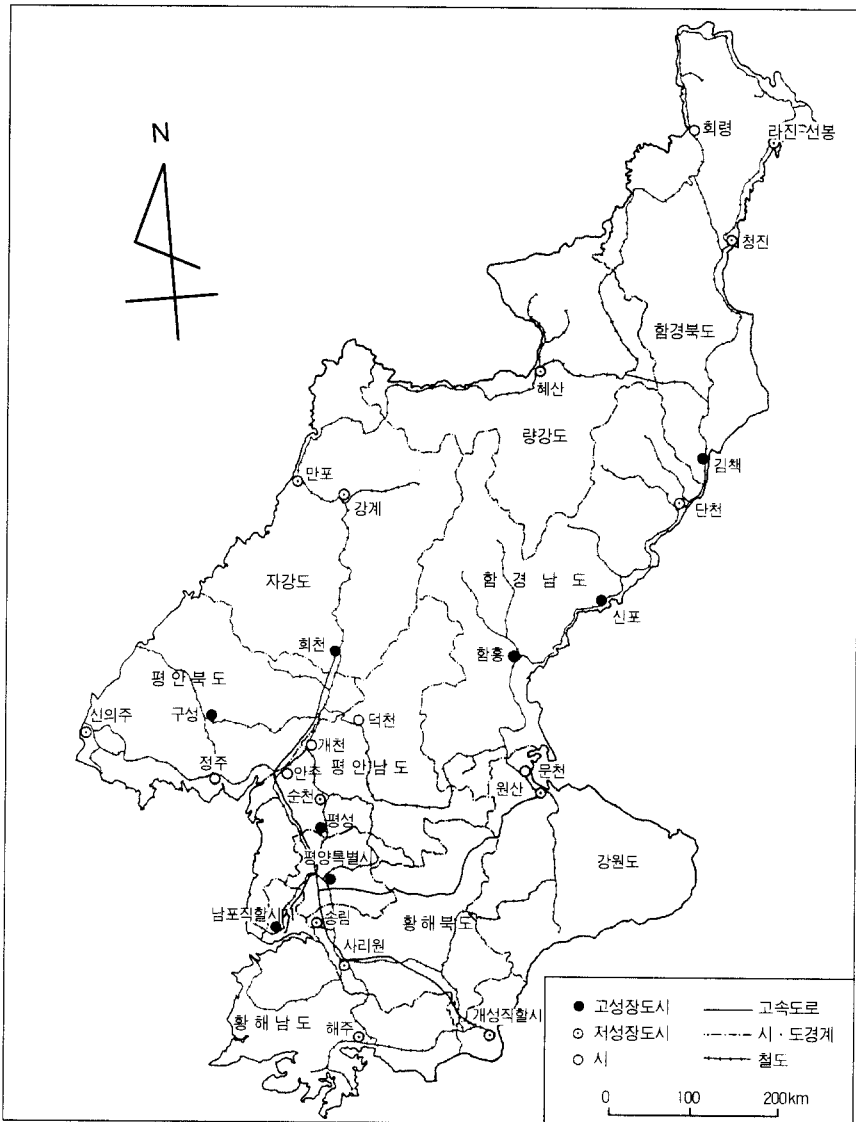


그림 1. 북한의 도시분포(1946-1994)

주: 도시 가운데 시로 표시된 도시는 인구자료 결여로 성장추세를 파악할 수 없는 도시임.

표 3. 북한의 시·도별 도시 인구성장

(단위: 천명, %)

시·도	도시명	1946	1967	1982	1991	1993	비교기간간 연증가율
평양	평양	323	1,555	2,525	3,335	2,741	15.9
남포	남포	79	141	661	802	731	17.6
개성	개성	-	141	331	385	334	5.3
평북	신의주	130	170	271	321	326	3.2
	구성주	-	28	150	192	-	24.4
평남	성천	-	28	241	257	273	33.7
	순천	-	-	392	481	-	4.5
	덕천	-	-	-	130	-	-
	개천	-	-	-	310	-	-
함북	안주	-	-	-	196	-	-
	청진	104	226	722	673	582	9.8
	김책	45	113	120	292	-	12.2
	라진-선봉	27	57	90	91	93	5.1
함남	라남	26	-	-	-	-	-
	회령	-	-	-	-	-	-
	함흥	103	424	691	802	710	12.5
	남포	133	-	-	-	-	-
황북	원산	-	85	210	289	254	7.9
	리원	-	-	-	-	-	-
황남	송림	35	85	30	96	-	3.9
	해주	65	113	210	224	229	5.4
강원	원산	104	226	331	289	300	4.0
	문천	-	-	-	-	-	-
자강	강계	-	170	180	257	223	1.2
	회천	-	28	150	192	-	24.4
량강	만포	-	28	90	93	-	9.7
	해산	-	85	150	224	178	4.2

주: 1. 1946과 1993년의 도시 인구는 북한 당국의 공식자료이고, 1967~1991년 도시인구는 한국에서 추정된 것임.
 2. 라진-선봉의 인구는 1991년까지는 라진시 만의 것이고, 1993년의 인구는 1995년 현재 라진-선봉 통합시의 것임.
 3. 평성시의 1967년 인구는 당시 평양시 평성구의 인구이고, 순천시와 단천시의 1982년 인구는 각각 1986년의 것임.
 라진시의 1991년 인구는 1986년의 인구수임.
 자료: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염형민·류승환, 1992; 리신희, 1995; 노용환·연하철, 1997.

국의 차별적인 개발정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즉, 평양근교에 위치한 북한의 이른바 수도권 위성도시(남포, 평성)와 북부 산간지대에 위치한 군수품 공업도시(구성, 회천) 등은 연평균 20% 내외의 높은 성장을 나타냈는데 반해, 휴전선 인근에 위치한 도시(해주, 개성, 원산)와 일부 국경도시(신의주, 해산) 등은 연평균 4% 내외의 매우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에 북한의 도시개발정책이 그들이 표방하는 지역균형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도시의 지리적 위치와 군사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양이 1980년대 이후에 다소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조선혁명의 도시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모범도시 건설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사상불량자, 신체장애자, 노약자, 왜소자)을 다른 지역으로 소개·분산하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고(Dege, 1996, 34), 또한 평양으로의 인구 전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시간의 성장격차로 북한의 도시규모 분포(city size distribution)도 크게 변화되었다. 한국가의 도시규모분포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특히 한 국가의 최대도시(제1위 도시) 인구의 과대성 또는 집중도를 나타내 주는 종주성(primacy) 또는 종주화 수준과 지역격차와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김인, 1991, 121-124), 이를 통해서도 지역격차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종주화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간편하고 가장 널리 사용하는 Davis의 4도시 지수방법(한 국가의 최대도시 인구를 그 다음 순위인 제2위, 제3위, 그리고 4위의 3도시 인구를 합산하여 나누는 지수 계산방법)에 의해 종주화지수를 구해보면, 1993년 현재 북한도시의 종주화지수는 1,355로 동년 한국의 그것(1,312)보다 다소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과의 비교에서도 높은 국가에 해당하는 수치이다(노용희 역, 1980, 179). 이와 같은 북한 도시의 종주화 현상은 그동안의 도시발달 과정에서 최대도시 평양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과대하게 성장한 결과로서, 이는 곧 북한의 지역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시·도 지역간 성장격차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특히 평양 지역과 그 외 다른 지역간의 발전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분석·논의한 북한의 지역간 발전격차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지역균형개발 정책은 과거에 가장 낙후한 북부 산간지대의 개발과 1970년대 이후 도·농간의 발전격차 완화에 다소 기여한 바도 없지 않으나, 국토 전체적으로 보면 평양시 지역과 여타 지역간과의 발전격차는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4. 북한의 지역균형발전전략 모색

1) 경제특구 연계개발전략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의 지역격차는 지역균형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양지역과 여타 지역간의 발전격차는 매우 극심하여서 이것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에는 통일과정에서 북한 인구의 대량 이동으로 말미암아 북한은 물론이고 남한에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의 지역간 균형개발문제는 앞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풀어야 할 현안과제인 셈이다. 북한은 현재 낙후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와 같이 부분적으로 대외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은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대외 의존적인 경제특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특구의 확대·개발은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제개발 대안으로서, 한국의 평화적 통일방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사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화적 통일 실현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경제특구의 확대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개방속도에 달려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의 확대·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이를 북한의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연계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외 개방적인 경제특구는 중국의 경우처럼 일반적으로 외자도입에 의해 국가경제의 효율적인 성장을 위해 도입된다(박정동, 1996, 123). 그러나 북한과 같이 국토면적이 협소한 국가에서는 국토면적이 넓은 중국과는 달리 경제특구의 적절한 공간배치를 통해 국가경제의 효율적인 발전과 함께 국토개발의 형평성, 즉 지역간의 균형발전까지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경제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동시에 평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한 여타 지역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경제특구를 설치하되 그러한 낙후지역에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배치·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외 개방적인 경제특구의 설치와 연계해 지역균형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는 어떤 유형의 경제특구를 개발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대외 의존적인 개발지점으로서의 경제특구의 성패 여부는 외국기업의 투자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특구도 외국기업의 투자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에 유리한 경제특구는 노동집약적인 가공공업 위주의 가공공업형 경제특구와 관광산업 목적의 관광형 경제특구로 볼 수 있다.

가공공업형 경제특구가 유리한 것은 북한이 노동집약적 가공공업에 필요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공공업 가운데 특히 섬유, 식품, 신발, 각종 전기·전자제품 등과 같은 경공업과 조립산업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이기 때문에 외국기업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에 유리하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고용효과가 커서 북한의 경제발전과 주민소득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북한 당국은 공업부문 가운데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경공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어(오정애, 1990; 서승환, 1994), 가공공업형 경제특구는 그들의 산업정책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경제특구개발은 현재 개발중인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의 주된 기능인 수출가공기지의 사업내역(박정동, 1996, 72-78) 및 현대그룹과 북한의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에 1999년 10월 초에 체결한 현대의 서해안 공단 개발사업합의(중앙일보, 1999. 10. 4일자, 1999. 10. 16일자) 등에서 볼 때 그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관광형 경제특구의 유리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관광형 경제특구는 일종의 자원개발형 경제특구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각종 자원(수자원, 임산자원, 광물자원, 자연관광자원)이 더 풍부하게 부존돼 있지만, 관광자원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개발되었거나 대규모로 개발할 만큼 부존량이 충분치 않다(국토통일원, 1988). 이에 비해 북한의 풍부한 관광자원은 거의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다. 북한은 현재 5대 광역관광권(평양·묘향산권, 남포권, 백두산권, 원산·금강산권, 개성·신천권)을 형성하고, 이를 외국관광객에게 개방하고 있다(강선보 외, 1996, 414-417). 그러나 이런 지역의 관광자원도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광객 유치에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지에 대한 관광형 경제특구의 개발은 관광객의 외화수입 증대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 개발지역 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향상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크다. 북한의 관광지 중에서 특히 한민족의 영산인 백두산과 절경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과 묘향산 등은 관광특구로 개

발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관광특구 개발은 1998년 11월부터 시작된 현대그룹에 의한 금강산 관광사업과 1999년 10월 27일 현대가 북한의 조선아태평화위로부터 확보한 금강산 관광사업 30년 독점사용권(중앙일보, 1999. 10. 30일자) 등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2) 경제특구 입지전략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의 대외 의존적 경제개발정책에 의한 경제특구의 설치와 연계해 지역균형개발을 추진한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경제특구를 어디에 입지시켜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해야 할 것인가 즉, 경제특구 입지전략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지역균형개발전략에서는 평양과 여타 지역간의 발전격차가 극심하므로, 어디까지나 이를 시정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특구의 입지원칙은 기본적으로 평양지역에서 벗어나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치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입지원칙과 더불어 가공공업형 경제특구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입지원칙은 이 유형의 경제특구는 주로 외국기업의 자본과 기술에 의해 개발되고, 여기서 생산한 상품 또한 수출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런 대외 지향적 경제활동을 고려하여 해안가 항만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전적 산업입지론에서 중시하는 운송비지향 입지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라진-선봉지구처럼 내륙보다는 해안지구에 제한하는 부분적인 개방정책과도 부합한다. 그리고 관광형 경제특구도 기본적 입지원칙을 따르되, 그것의 입지원칙은 북한의 주요 관광지가 이미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으므로, 해안·내륙의 위치와 상관없이 관광자원의 개발잠재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원칙 하에서 먼저 가공공업형 경제특구의 후보지를 선정·제시해 보고자 한다. 노동집약적인 가공공업형 경제특구 또는 대규모 공업단지의 적정 입지후보지는 풍부하고도 양질의 노동력, 양호한 대내외 교통망, 풍부한 용수, 전력, 관련산업의 발달 등과 같은 입지조건이 구비된 곳이어야 한다. 가공공업형 경제특구의 입지원칙과

표 4. 가공공업형 경제특구 후보지 중심도시의 입지조건

도시 입지조건	신의주	남포	해주	청진	김책	함흥	원산
노동력(인구)	326천명	731천명	229천명	582천명	292천명	710천명	300천명
철도노선수	경의선 외 3선	평남선 외 1선	황해청년선 외 3선	경라선 외 2선	평라선 외 1선	평라선 외 2선	강원선 외 1선
항만의 종류 연간하역능력	일반항 54만톤	무역항 800만톤	무역항 240만톤	자유무역항 800만톤	일반항 320만톤	무역항 350만톤	무역항 170만톤
인근 공항	신의주	순안, 과일	과일, 황주	어랑	어랑	선덕	갈마
용수원	압록강 삼교천	대동강	광석천 신광천	수성천 경성천	남대천	성천강	안변천
인근의 전력발전소 (시설용량: kw/h)	수봉 (70만) 천마 (1.2만)	평양화력 (50만) 대동강 (?)	해주화력 (1만)	서두수 (40만) 청진화력 (3.6만) 부령 (3.6만)	허천강 (40만) 부전강 (22만)	장전강 (40만) 부전강 (22만)	금강산 (80만)
대학교 수 (재학생 수)	신의주 경공업대 외 3개교 (8,000명)	남포수산대 외 1개교 (4,500명)	해주의학대 외 3개교 (6,000명)	청진광산 금속대 외 10개교 (21,500명)	김책체육 단과대 (1,500명)	화학공업대 외 6개교 (16,500명)	원산경제대 외 8개교 (19,500명)
발달공업	기계, 화학 섬유, 군수	금속, 기계 조선, 섬유	화학, 기계	제철, 제강 화학	금속, 기계 조선	화학, 기계 모직	기계, 조선 수산가공

자료: 국토통일원, 1989: 염형민·류승한, 1992: 노용환·연하정, 1997: 윤웅, 1995.

함께 그 입지조건을 고려해 보면, 평안북도의 신의주 지구, 남포 지구, 황해남도의 해주 지구, 함경북도의 청진과 김책 지구, 함경남도의 함흥 지구, 강원도의 원산 지구 등이 적합한 입지후보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구의 중심도시들은 대외 지향적 가공공업형 경제특구의 기본적 입지원칙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그 입지조건을 대체로 충족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표 4).

이러한 가공공업형 경제특구의 예정지 중에서 서해안 지역에서는 신의주와 해주 지구가, 동해안 지역에서는 이미 개발되고 있는 함북의 라진-선봉 지구 외에 함흥과 원산 지구가 우선적으로 집중·개발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4지구는 각각 북한의 낙후지역에 위치한 중심적 도시이기도 하여, 이들을 각각 낙후지역개발의 거점으로 연계·활용하면, 통일과정에서 북한에서 가장 발달된 수도 평양과 남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을 상당히 저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의주 지구의 중심인 신의주시는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중국의 단둥(丹東)과 마주하고 있는 국경도시이지

만, 서해안지역 중에서 북부 낙후지역인 평안북도의 최대 산업 및 행정중심지(도청소재지)여서 이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주시는 일찍부터 황해도의 실질적인 중심지(현재는 황해남도의 도청소재지임)로 발달해 온 항구도시로서, 서해안지역의 남부 낙후지역인 황해도의 개발을 위한 가장 적합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함흥시는 동해안 지역의 최대도시(1993년 현재 인구 약 71만명)이기는 하지만, 동해안 지역의 중부 낙후지역에 속하는 함남지역의 최대 중심지여서 이 지역의 개발거점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산시는 낙후한 동해안 지역의 남부지역 즉, 강원도의 최대 중심지여서 이 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거점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서해안의 남포 지구와 동해안의 청진 및 김책 지구는 가공공업형 경제특구 입지후보지로 충분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그 지리적 위치로 볼 때 선(先)지정 후보지의 성공적 추진에 이어서 순차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남포는 북한 제2의 도시(1993년 현재 인구 약 73만명)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또한 서해안의 최대 무역항구여서 대규모 가공공업형 공업단지 조성지로 매우 유리한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남포는 수도 평양과 인접하고 있어서, 이 곳이 대외 개방적 경제특구로 조기에 개발될 경우, 북한 수도권의 집중화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4대 거점(경제특구)이 어느 정도 개발된 후에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함경북도의 최대 중심도시인 청진은 경제특구 개발에 필요한 입지조건을 두루 잘 갖추고 있지만(표 4), 인접한 지역에 라진-선봉 지대가 개발되고 있어 이것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도 차후에 지정·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책은 함북과 함남의 접경지역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개발거점으로 필요시 되나, 이 역시 함북과 함남의 주 개발거점을 형성한 후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책 지구는 인접한 단천에 세계 최대의 마그네사이트 광산이 있어 이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산업유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편, 관광형 경제특구로는 백두산 지구, 금강산 지구 그리고 묘향산 지구 등이 집중·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들 지구는 북한의 관광지 중 개발잠재력이 가장 큰 곳으로서, 개발에 따른 지역발전 파급효과도 가장 크게 기대되는 곳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백두산 지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2,750m)과 그 연봉, 천지, 백두산 폭포, 이명수 폭포, 백두온천, 백두산 스키장, 삼지연 호수(둘레 약 2.4km), 각종 동·식물 등과 같은 다양하고 빼어난 관광자원으로, 현재에도 평양-삼지연간에 개설되어 있는 항공로를 통해 외국관광객이 방문할 만큼 북한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의 하나이다. 이 지구는 호텔 등의 관광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량강도 삼지연을 기반으로 하여 백두산 전역을 관광·휴양특구로 지정·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특구의 개발 효과는 외자(外資)에 의해 북한의 경제발전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량강도의 지역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강산 지구는 세계적 명산 금강산(외금강, 내금강) 외에 인근 고성군에는 해금강, 통천군에는 총석정, 원산시에는 송도원 해수욕장과 명사십리 등과 같은 세계적

절경이 준비하게 분포하고 있어, 북한에서 관광특구로의 개발가치가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이미 현대그룹에 의해 금강산이 관광특구와 유사한 형태로 개발되고는 있으나, 보다 그 개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강산 인근의 여러 관광지까지 묶어서 종합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묘향산 지구는 묘향산의 빼어난 산세와 계곡의 절경, 고려시대의 유명한 사찰 보현사, 북한과 외국과의 외교관계에서 받은 각종 선물을 전시한 국제친선전람관, 인근의 향산온천 등으로, 북한에서 평양을 제외한 관광지로는 가장 먼저 외국인에게 개방할 만큼 북한이 자랑하는 관광지이다. 묘향산은 비록 그 입구와 중심이 평안북도 향산군에 속하기는 하나, 평안남·북도과 자강도 등의 3도에 걸쳐 있고, 더욱이 지척에 위치한 자강도 희천시에는 유명한 원흥과 남동온천이 분포하고 있어, 이들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개발하면 3도 접경지역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5. 요약 및 결론

이 논문은 북한의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살펴보고, 그것과 관련하여 북한의 지역간 발전격차를 분석·검토해 보았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통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대안 즉, 북한의 지역균형개발 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이념에 기초해 일찍부터 지역균형개발정책을 강조하고 견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효과는 미약해 도시와 농촌간의 발전격차를 줄이는 데에만 다소 기여하였을 뿐, 국토전체로 볼 때는 오히려 지역불균형발전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시와 여타 지역간의 극심한 발전격차가 바로 그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국토공간구조는 그 동안 평양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성장하여서, 중주도시 또는 하나의 중심에 여타 다른 지역이 주변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매우 불균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국토공간구조는 Friedmann이 1966년에 경제발전단계와 공간구조발달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주

장한 중심-주변모델(core-periphery model)의 4단계에서, 제1단계 전산업단계에 나타나는 공간구조 즉, 지방 중심지가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계층이 없는 공간구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Dege, 1996, 36) 보다는, 제 2단계 초기산업화단계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단일의 종주도시 또는 중심지역을 형성하는 공간(지역)구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이와 같은 공간구조 형성은 북한의 지역균형개발정책이 시행과정에서 정치·군사적 개발논리가 우선됨으로 인해 파행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북한의 지역격차를 방지할 경우,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모두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최근에 북한에서 경제적 난국을 타개할 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대외 개방적인 경제특구는 북한의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도 확대·지정되어야 한다면서, 경제특구와 연계하는 지역균형개발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경제특구를 확대·개발할 경우, 북한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용이하게 유인할 수 있는 풍부한 인적 및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노동집약적 가공공업형 경제특구와 관광형 경제특구를 제안하였으며, 이런 경제특구의 입지 후보지를 북한의 지역균형개발과 연계하여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가공공업형 경제특구로는 평안북도의 신의주 지구, 남포 지구, 황해남도의 해주 지구, 함경북도의 청진 지구와 김책 지구, 함경남도의 함흥 지구, 강원도의 원산 지구 등이 양호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 가운데 특히 신의주, 해주, 함흥, 원산 등의 지구는 우선적으로 지정·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관광형 경제특구로는 량강도의 백두산 지구, 강원도의 금강산 지구, 평안남·북도 및 자강도의 접경지대에 위치하는 묘향산 지구 등을 후보지로 제안하였다.

북한이 최근에 행한 일련의 경제정책과 그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앞으로 북한은 완만한 속도로 경제특구를 추가적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서의 경제특구는 비록 그것이 매우 제한된 개방공간이라 할지라도 북한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데 있어 매우 크게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경제특구 개발은 북한의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현재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라진-선봉 경제특구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서해안 공단개발 사업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개발전략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대북 정책도 그 범위를 확대하여,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 후의 바람직한 국토공간구조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북한의 지역균형개발전략을 중요한 과제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선결적 과제로, 비록 자료의 한계로 연구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북한의 변모된 국토공간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학계의 관심과 노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文 獻

- 강영원, 1994,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켜 유리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 중요담보", 경제연구, 3, 17-19.
- 강선보 외, 1996, 북한사회의 이해, 집문당, 서울.
- 강정모, 1991, 북한의 무역 및 대외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
- 공보처, 1993, 도표로 본 북한의 오늘.
- 국토통일원, 1988, 북한경제개관.
- _____, 1989, 북한 산업지리 연구.
- _____, 1995, 북한개요.
- 권기철, 1997,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김성금, 1999, "지방공업의 부문구조를 개선완비하는 것은 균형개발의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3, 32-35.
- 김 원, 1988, 사회주의 도시계획, 보성각, 서울.

- 김 인, 1991. 도시지리학원론, 법문사, 서울.
- 남궁영, 199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연구: 중국·베트남 비교, 민족통일연구원.
- 노용환·연하청, 1997. 북한 인구센서스의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 노용희(역), 1980.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정책, 법문사, 서울(Bertrand, R., 1979, National Urbanization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Bank, Washington, D. C.).
- 류우익, 1996. "통일국토의 미래상: 공간구조 개편구상", 대한지리학회지, 31(2), 44-56.
- 리경섭, 1990. "지방공업 발전의 원칙", 경제연구, 4, 40-42.
- 리기반, 1999. "군을 단위로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올해 경제건설의 기본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 경제연구, 2, 8-10.
- 리수일, 1990.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 경제연구, 3, 43-45.
- 리신호, 1995.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주요 특징과 그 전망", 경제연구, 4, 37-40.
- 박범조·고석찬, 1998. "지역 불균형 발전의 결정 요인: 지역간 이질성 편의를 고려한 회귀 모형의 적용", 지역연구, 14(2), 35-50.
- 박원배·리철준, 1995. "황해남도 지방공업 발전을 위한 자연경제적 조건에 대한 정량적 평가", 지리과학, 1, 16-19.
- 박정동, 1996. 북한의 경제특구,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 박재승, 1994.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하는 것은 지방공업 발전의 중요원칙", 경제연구, 4, 28-31.
- 박재영, 1997.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연계에 관한 주체의 경제리론의 독창성", 경제연구, 1, 13-16.
- 배기찬, 1994. 신북한 지리지, 다나, 서울.
- 북한관광요람 편찬위원회, 1998. 북한 관광요람 I·II, 한국문원, 서울.
- 북한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1993.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법규집.
- 북한연구소, 1983. 북한총람.
- _____, 1994. 북한총람.
- 서승환, 1994. "경공업 제일주의 방침을 관철하는 것은 현시기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요 전략적 과업", 경제연구, 2, 8-10.
- 손명선, 1999. "군농업생산도대와 그의 확대강화에 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3, 26-28.
- 손철준, 1992.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경제연구, 4, 15-17.
- 연하청, 1986.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 염형민·류승환, 1992. 북한의 국토개발편람, 국토개발연구원.
- 염형민, 1994. 북한의 국토개발, 공보처, 서울.
- 오정애, 1990.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국 경공업대회에 보내신 서한은 경공업 발전의 앞길을 밝혀준 강령적 문헌", 경제연구, 4, 5-8
- 육군본부, 1990. 북한 전략정보요람.
- 윤복녀, 1992. "군을 단위로 하는 지방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한 중요방도", 경제연구, 3, 17-19.
- 윤복녀·김강산, 1992. "공장, 기업소들을 고루 배치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요구", 경제연구, 2, 34-37.
- 윤용, 1995. 북한의 지리여행, 문예산책, 서울.
- 이재하, 1996.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지역균형개발 방안 모색",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제 19회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한반도 평화정착의 제도화와 협력증진, 89-118.
- 최윤숙, 1992. "국토관리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축성의 중요한 담보", 경제연구, 1, 40-43.
- 편집위원회, 1992. "과학원과 더불어 지리과학이 걸어온 자랑찬 40년", 지리과학, 4, 2-5.
- _____, 1992. "대자연 개조를 위한 과학연구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지리과학, 2, 2-5.
- 평양사범대학 지리학부, 1964. 조선지리 소편람, 과

- 학지식보급출판사, 평양.
- 하경준, 1988, "북한의 도시규모분포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북한경제통계자료집(1946, 1947, 1948년도).
- 한세정책연구소, 1994, 남북한 경제교류와 투자전망, 한세, 서울.
- 한태홍, 1995, "군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 경제연구, 1, 7-10.
- 홍경희, 1979, 한국도시연구, 홍경희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대구.
- Berry, B. and Horton, F., 1970, *Geographic Perspectives on Urban Systems*,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 Barma, B. J., 1998, "An Economic Roadmap to Korean Reunification: Pitfalls and Prospects", *Asian Survey*, 38(3), 265-290.
- Dege, E., 1996,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Eyes of a German Geographer: A Comparison of Spatial Structure", *대한지리학회지*, 31(2), 29-43.
- Eberstadt, N., 1991, "Population and Labor Force in North Korea: Trends and Implications", 한국개발연구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200-253.
- , 1998, "North Korea's Interlocked Economic Crises: Some Indication from 'Mirror Statistics'", *Asian Survey*, 38(3), 203-230.